월/요/광/장

김 택 민

삼족(三族)을 주멸하는 법

조금 지난 일이지만 4성장군으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어떤 분이 지금은 서거한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 대통령은 삼족(三族)을 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읽었다. 이를 보고 나는, 나라의 고위직을 지낸 분이 어떻게 그리도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하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앞으로 양식 있는 분은 이런 언사를 다시 입에 담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법의 일단을 소개한다.

동양의 전통법에는 '삼족을 주멸한다'는 법이 있었다. 이 법의 뜻은 '정법의 삼족 내의 친속은 설혹 죄의 정상을 알지 못했더라도 죄주어 멸한다'는 것으로, 가장 극악한 죄를 범한 경우 본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친속까지 연좌하여 처벌해야 죄 갚음을 다할 수 있다는 발상에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삼족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강의하다가 가끔 학생들에게 삼족의 범위를 물어보면 대개 본족, 외족, 처족이라고 대답하는데, 반드시 틀리는 답은 아니지만 통설은 아니다.

삼족의 범위는 학자들에 따라 설이 다른데, 범인의 본족 내로 한정하며, 부·자·손 3대를 가리킨다는 설이 주류 유학자들의 통설이다. 이와는 달리 삼족은 부족(父族)·모족·처족으로 본족 외의 친속을 포함한다는 설도 있지만, 이는 소수설로서 실제로 시행된 예는 드물다.

삼족 주멸의 법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부터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역대 왕조는 조문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법을 계속 시행하였고, 조선왕조에서도 시행하였다. 조선왕조는 명나라의 형법전인 '대명률'을 이어 받아 썼는데, 이 법전에서 모반죄는 삼족을 주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그 조문의 일부이다.

'무릇 모반(謀反)하거나 대역(大逆)을 범한 자는 단지 공모했더라도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陵遲處死)한다. 조부·부·자·손·형제 및 동거인(성이 다른 자도 포함)·백숙부모·질로 16세 이상은 모두 참수한다. 15세 이하의 아들, 모·녀·처·첩과 그 아들의 처·첩은 공신에게 노비로 주고, 재산은 관에 몰수한다.'

이 조문에서 모반이라 함은 군주를 위해하려고 모의한 범죄를 말하고, 대역이란 종묘·왕릉·궁궐을 훼손한 범죄를 가리킨다. 지존인 황제를 위해하려고 꾀하거나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손상하는 행위는 극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범은 능지처사하고, 일족은 죄와 무관하더라도 16세 이상은 참수하고, 15세 이하 및 여성은 노비로 삼아 공신들에게 준다는 것이다.

'능지처사'는 신체를 천천히 이지러뜨린 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다. 대개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차례로 베어낸 뒤 목을 친다. 칼질은 3일 동안 시행하며, 죄가 무거울수록 8도, 16도, 24도의 방식으로 칼질의 회수가 많아진다. 명나라 말기 극악한 환관 위충현은 3천600 회의 칼질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능지처사는 중국에서 시행되었고, 조선에서는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 같이 참혹한 '삼족 주멸'의 법은 전제군주제 시대의 분노와 복수의 성격을 띠는 형벌이며, 생명과 신체를 경시하던 전근대시대의 악법 가운데서도 가장 악독한 형법이다.

보도를 보면, ○○○ 전 국방장관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사학법 폐지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행한 기념사에서 "사학법 개정은 지난 좌파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 대통령은 삼족을 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 전 국방장관은 과거 노태우 정권시절에 ○○건설과 ○○정공 등으로부터 군납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는 등 율곡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자성은커녕 사학의 경영권을 악덕 재단에게 다시 돌려주자고 외치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 진력하던 전직 대통령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니, 그 파렴치함과 무지함이 차라리 불쌍하게 느껴진다.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황 성 연

형사조정제도를 아시나요

사람을 욕할 때 "이 사기꾼아!", "도둑놈 같은 사람!"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돈 빌려가고 안 갚으면 사기죄로, 자기 물건이 어느 날 안 보이면 절도죄로,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장을 써서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사건이 많다.

수사를 해보면 이런 고소, 고발 사건 중 약 80%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이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접수된 고소사건이 58만5천857건이고, 그 중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각하 처분된 것이 6만5천55건으로 전체 고소사건 중 약 11%에 해당한다. 매년 접수되는 고소사건 중 기소하는 사건의 비율은 약 1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되는데, 그 중 상당수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회 분위기가 각박해지면서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법대로 하자"며 고소장을 써서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해서 맞고소를 한다.

특히 아파트 주민 사이의 분쟁이나 종교기관 내부의 분쟁 등 여러 명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폭행, 횡령, 배임, 명예훼손 등 다양한 죄명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면 고소당한 쪽도 다시 고소하는 일이 반복되어 여러 검사실에서 오랫동안 사건을 처리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형사 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므로 고소당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형사와 민사 등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면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을 크게 밑돌지만,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은 일본보다 약 50배~60배 더 많다. 수사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민사절차로 처리해야 할 고소, 고발이 다른 나라보다 남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4년 9월부터 각 검찰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고소사건과 의료, 명예훼손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교사, 기업인 등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업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위원은 전문 지식과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분쟁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고 있다. 형사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당사자가 지출해야 할 비용,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지검에도 형사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다양한 직업, 경력을 가진 조정위원 87명이 활동하고 있다. 형사조정 성립률은 2009년 현재 약 42%로 조정을 의뢰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만족한 결론을 얻고 돌아갔다.

아직까지도 형사조정을 의뢰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연락하면 검찰에서 그런 일도 하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현재 형사조정제도는 검찰 자체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조속히 관련 규정이 법률화되어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지검 검사〉

기 고

박 재 순

초일류 기업들의 무한도전 'F1 그랑프리'

F1그랑프리(국제 자동차대회)는 거대자본이 움직이는 비즈니스의 세계다. 우리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F1그랑프리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의 치열한 마케팅 각축장이다.

현재, F1그랑프리에는 자동차, 금융, IT, 전자, 음료업체 등 무려 200여 개의 초일류기업이 스폰서로 참여, F1자동차나 드라이버의 옷에 자사의 상표를 붙이는 대가로 적게는 수억 원부터 많게는 3천500억 원까지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F1대회가 이처럼 대규모 스포츠마케팅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F1의 폭발적인 관중동원 능력과 높은 TV시청률 때문이다.

F1그랑프리는 5대륙을 순회하는 글로벌 스포츠로서, 평균 입장객은 20만 명에 이르고 안방에서 TV로 F1그랑프리를 지켜보는 시청자 수는 184개국 6억 명에 달한다. 전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싶은 기업들에게 이보다 좋은 마케팅 기회가 없는 셈이다.

특히, F1대회는 4년 주기의 월드컵, 올림픽과 달리 매년 17~18차례 열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세계 6억 명의 시청자에게 매 2주마다 자신의 상표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기업들로서는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최근 국내기업들도 F1을 비롯한 자동차경주대회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업의 광고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FOM(F1 공식 매니지먼트 업체)과 5년간 글로벌 파트너 자격으로 후원계약을 맺은 LG전자는 F1대회 TV 중계시 LG로고를 독점적으로 노출하고 F1 이미지를 제품광고나 프로모션에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을 확보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자동차 경주대회인 F1 후원을 통해 수천만 불의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모터 스포츠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자동차 관련 국내기업으로서는 금호타이어를 들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외 모터 스포츠 경기를 1992년부터 지속 후원함으로써 기술력 축적은 물론 이러한 기술력을 상품화해 F1의 입문단계인 F3대회 타이어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는 세계 F3 시장 넘버원 브랜드로 성장했다. 모터 스포츠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는 정공법을 선택했고, 과감한 투자의 결과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2010년 F1 코리아 그랑프리에도 많은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F1은 단지 일부 기업의 홍보 마케팅 차원을 넘어 세계적 금융위기로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세계 거대자본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 1차 산업 중심의 취약한 전남의 산업구조를 서비스산업과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F1경주장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고, 국가지원의 근거가 될 F1지원법이 우리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한나라당은 2010년 F1대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그리고 한국의 재도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분리수거 생활화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성숙했으면

편의점은 매주 정해진 날 한 번씩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정리해 새벽에 내놓는다.

쓰레기통 4개를 놓고 일반쓰레기, 플라스틱, 유리병, 고철류를 각각 분리해서 버리도록 써붙여 놓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걸 잘 지키지 않는다.

분리수거통이라고 해서 항목별로 커다란 글씨로 써붙여 놨건만 컵 라면 비닐이나 각종 쓰레기를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넣고 심지어 라면 국물과 일반 잡쓰레기에 플라스틱류를 범벅으로 섞어놔 아예 분리수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분리수거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실천하는 게 곧 국민수준이라고 본다. 잠시 잠깐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최소한의 환경보호 노력조차 게을리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그 자신과 자녀들에게 돌아감을 잊지 말자. ▲윤용숙·광주시 서구 벽진동

악덕 체납자에 악용되는 '차령초과말소제도' 개선을

차령초과말소제도는 당초 차량과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해 차량에 압류 조치가 취해졌으나 이 압류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차주들이 차량을 말소하지 못하고 결국 무단 방치하는 상황을 막아보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권자들이 체납액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차량가격보다 압류액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신청한 가난한 체납자에게서 체납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체납액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압류 설정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제도가 악덕 체납자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 고쳐져야 할 제도임에 틀림없다.

체납액도 받지 못하고 노후차도 폐기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다면 이 차령초과말소제도 역시 다시 손봐야 할 것 같다. ▲유은진·광주시 서구 덕흥동

사 설

한 초등생의 '억울한 죽음' 너무 참담하다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신음하는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쏴 무참히 살해한 끔찍한 일이 벌어져 충격이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할 뿐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48)씨는 지난 4일 밤 광주시 일곡동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서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J(10)군을 치었다. 이씨는 신음하고 있는 J군을 자신의 차에 싣고 담양의 한 저수지 인근으로 데리고 가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한다.

이씨의 범행은 한마디로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짓이다. 사람의 탈을 쓰고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생명을 이런 잔혹한 방법으로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이씨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범행수법으로 미뤄 여죄는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J군의 억울한 죽음에 일조(一助)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사고 장소는 상점이 밀집한 곳이다. 따라서 늦은 밤이었지만 목격자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실제로 사고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다. "차에 치인 후 머리에 피를 조금 흘렸지만 멀쩡하게 일어섰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당시 목격자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거나, 아이를 만취한 운전자에 맡기지 않고 병원까지 동행만 했더라도 참극만은 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경찰의 부실수사도 문제다. J군의 부모가 실종신고를 한 뒤에도 단순 가출 등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사고 장소 일대에서는 "어린이가 승합차에 치였다가 다시 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경찰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J군이 1주일 간이나 산속에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J군의 죽음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지만 탐욕과 이기주의에 찌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경징계라니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당초 중징계 등 '엄중 조치' 방침을 표명한 것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전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5-2007년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공무원 15명(도 본청 소속 공무원과 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견책과 불문경고, 불문 등의 경징계 결정을 했다. 일선 시·군도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6급 이하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들에 대해 경징계에 가까운 처분을 내렸다. 나주시는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모두 불문경고 했으며 곡성군 역시 불문경고와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광주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달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경징계가 예상된다.

이들 지자체의 관대한 처분은 농민을 두 번 울리는 행위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직 사회 기강 운운하며 중징계를 하겠다고 요란을 떨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경징계 처벌이라니 이 무슨 경우인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이미 법을 어겼다. 하물며 명색이 공직자가 쌀직불금까지 부정 수령했다는 것은 예산을 축낸 범죄다. 국민의 혈세를 관리해야 할 공직자가 도둑질에 앞장선 것이다. 국민에게 사죄하는 차원에서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되레 가벼운 처벌로 빠져나가려 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제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의 느슨한 준법정신과 관대한 처벌이 만연된 탓이다. 정부는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가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직불금 부당수령은 불 보듯 뻔하다.

無 等 鼓

철(鐵)의 여인들

강한 의지를 가진 여성이라는 의미의 '철(鐵)의 여인'은 대개 여성 국가 원수들에게 붙여져 왔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 11년간 재임한 마거릿 대처가 대표적이다.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그렇게 불렸다.

우리나라에도 새롭게 주목받는 '철녀(鐵女)'들이 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오은선(43·블랙야크)·고미영(42·코오롱스포츠)씨가 그들이다. 정치인이 아닌 산악인이며, 따라서 의지의 실험 무대가 산이라는 점이 앞선 여성들과는 다르다.

불혹(不惑)의 나이를 넘어선 이들의 등반 속도와 기세는 놀라울 정도다. 한 해에 8,000m급 봉우리 3~4개를 뚝딱 해치워 남성 히말라야니스트들조차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고씨는 지난 9일 다울라기리(8,167m) 정상을 무산소로 등정했다. 지난달 1일 마칼루(8,463m), 18일 칸첸중가(8,586m)에 이어 40일새 3개를 올랐다. 2006년 초오유 등정 이후 2년8개월 만에 10개를 올라 '기록제조기'로 불린다. 현재 페이스라면 최단기간 등반기록(기존 8년) 달성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오씨는 지난달 6일 칸첸중가, 21일에는 다울라기리 정상을 밟아 11개를 등정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4개 봉을 올랐다.

14좌 완등자는 남성의 경우 15명에 이르지만, 여성에게는 '전인미답'의 기록이다. 에두르네 파사반(36·스페인)과 겔린데 칼텐브루너(39·오스트리아)가 12개로 앞서있고 오씨와 고씨가 그 뒤를 쫓고 있지만 등반 속도로 보면 한국 여성들이 추월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들은 올 가을 '지현옥 10주기 추모 안나푸르나 원정대'에 나란히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두 사람이 예정된 등반을 무사히 마치고 14좌 완등의 꿈을 함께 이루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